

압수수색 앞두고...전 전남경찰청장 숨진 채 발견

'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재임 시절 인사 청탁 혐의로 수사선상 오른 듯 광주지검 "지난 14일 입건됐지만 통보도 안해"...사건 브로커 수사는 계속

'사건 브로커' 의혹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치안감 퇴직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서울강동경찰과 경기하남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장을 지낸 뒤 치안감으로 퇴직한 A씨가 이날 오전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가족은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검단산에 간다고 했다. 연락이 안된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실종 신고 24시간만인 15일 오전 10시 경기도 하남 검단산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가 수사중인 일명 '사건 브로커' 의혹과 관련해 지난 14일 입건된 상태였다.

'사건 브로커' 수사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다년간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B(62)씨를 검찰이 구속기소하면서 본격화 됐다.

B씨는 경찰 고위직·검찰 인맥을 내세워 수사·인사 청탁을 하거나, 지자체 입찰 공사 수주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2020~2021년 가상자산 사기범(별도 구속 기소) 등으로부터 수사기관 청탁을 대가로 다른 공범과 함께 고가의 외제 차 등 18억54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발돼 구속기소 됐

다.

검찰은 A씨가 전남경찰청장 재임시절 사건 브로커 B씨의 인사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닌가 보고 수사 선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전남경찰청 경감은 인사청탁 관련건으로 검찰에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A씨의 재임시기(2020년 8월~2022년 1월)에는 경정·경감급 인사를 놓고 인사는란이 일었다. 경정·경감급 등 인사결정권은 지방청장에게 있다.

검찰은 전남경찰청의 3년치 인사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15일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다.

광주지검은 "A씨가 입건자로 신분이 전환된 것은 맞다"면서 "A씨에게 입건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등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공식 확인을 거부하고 있으나 15일

전남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김씨가 숨지자 두 건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A씨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사건브로커에 대한 수사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B씨를 통해 수사·인사 청탁에 관여한 것으로 거론되는 다수의 전·현직 검경 인사들에 대한 수사다.

검찰은 현재 '인사 청탁'과 '수사 청탁' 등 두 축으로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B씨가 휴양·산책로 데크시설, 중앙 냉난방 시설 사업을 하고 있는 점으로 미뤄 공공서 자재 납품 비리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 안팎에서는 B씨와 조직폭력배 연관설도 나오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딸 같다' 부하 여직원 추행 시교육청 전 사무관 벌금형

'딸 같다'며 부하 여직원을 추행한 광주시교육청 전직 사무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판사 임영실)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직 사무관 A(59)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부하 여직원과 서울에서 출장업무를 보던 중 숙소에서 여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자를 가져다 달라'며 자신의 방으로 B씨를 불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날 아침에는 "어제 일은 실수였다. 딸 같아 그랬다"며 재차 손을 잡고 추행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시·감독을 받는 부하 직원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어두운 이면도로 누워있는 사람 치어 숨졌다면?

광주지법 "운전자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워"...1·2심 모두 무죄

어두운 이면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1심과 항소심 모두 운전자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A(46)씨는 지난 2021년 9월 6일 밤 11시 50분께 광양시 중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도로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했다.

검찰은 A씨가 운전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선고를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가 우회전을 한 도로에는 가로등이 없고 인근 2층의 작은 간판의 불빛만 비치는 어두운

환경이었고, 도로 양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너무 많아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도.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우회전 교차로에 주차된 승합차 뒷편에 누워 있어 운전자로서는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장재연을 통해서 운전자가 피해자가 누워있는 지점을 주시하면 발견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진행방향 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을 것 까지 예측하면서 운전하기 어렵고 교차로에서는 보행자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다"며 "한밤 중 골목길 이면도로 교차로에 주차된 차량 너머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것은 통상 예견되는 사태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아트패스 볼 것 많네요 '광주아트패스 아트랑 골목워크'에 참가한 조선훈 학생이 15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극장 일대 영화골목을 둘러보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날 충장로 장인 가게, 자산동 보리밭거리 등지도 견학했다. /김진수 기자 jeans@

고향 선·후배에 마약 판매...장흥경찰, 공급책 등 일당 적발

장흥에서 고향 선·후배에 마약을 판매한 마약 공급책과 마약을 구매해 투약한 일당이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장흥경찰은 마약 공급책인 50대 남성 A씨와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 B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6년여 동안 간 장흥군 고향 선·후배 관계로 지내온 지인 6명에게 필로폰을 판매 및 투약·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10월까지 1년 가까이 A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필로폰 중독 후유증을 호소하며

자수하자 수사에 나서 장흥군 내 A씨의 거주지에서 A씨를 현장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오던 중 A씨가 B씨 외에도 5명에게 추가로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고, 일당 2명을 추가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검거 및 자수한 일당 3명에 건당 50~70만원을 받고 17회 마약을 판매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일당 중 아직 체포되지 않은 3명에 대한 신원을 특정하고 이들을 추적하는 한편 마약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서 70억대 전세보증금 빼돌린 일당 검거

북부경찰, 8명 송치

광주에서 70억대 전세보증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광주북부경찰은 사기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50대 초반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에게 명의를 제공한 일당 7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 일대에서 아파트 65채를 지인 7명의 명의로 매입해 세입자에게 전세를 내주고 보증금 71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과 지인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된 아파트를 저렴한 가격에 매매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전세를 내주고 보증금을 받아 아파트를 구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24일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30대 여성 피해자 B씨가 광주북부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경찰은 B씨 고소장을 접수한 뒤 동일한 수법으로 65명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 사실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에 사용한 수십개의 타인 명의 카드와 통장, 휴대전화, 타인 명의 차량과 고급 명품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광주시 주택정책과 전세사기 피해자 TF팀과 공조해 피해자들을 국토교통부에 지원·연계했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